尹, 오늘 2주년 회견···채상병·김여사 특검 입장 밝힌다

대국민 메시지 발표 이어 주제 제한 없이 1시간 정도 질문 받아 1인 25만원 지원·의과대학 갈등·총리 인선 등 현안 거론될 듯

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 견을 열고,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.

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에 나 선 가운데 여는 이번 회견에서 '소통'과 '협치'를 부 각하고,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 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. 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 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.

윤 대통령은 약 20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 대 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 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,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 영 계획을 밝힌다.

특히 연금·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. 또 최근 경제 상황 에 대한 평가,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

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 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 가량 질문을 받는

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"국민이 정말 궁금 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"고 주문했다는 후문이 다.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 상하고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.

'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' (채 상병특검법)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,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, 민정수석실 부활, 의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.

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고, 해당 사 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 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

여권에서 거론된다.

김 여사와 관련해서는, 올해 1월 KBS 신년 대담 에서 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 을지 주목된다.

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 수 논란과 관련, "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 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"며 "매정하게 끊지 못 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"고 말한 바 있다.

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 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 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해 당 수사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.

다만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 방 수수 의혹을 두고 '김 여사 특검법'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.

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민정수석실 부활 도 회견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. 윤 대통령은 "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"며 민정수석실 복 원의 불가피성을 밝혔다.

하지만 야권은 김주현 신임 정무수석 등 검찰 출 신 인사들로 민정수석실이 구성된 점을 들어 윤 대 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.

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 금 지급,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정 갈등,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

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.

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이번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 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.

전날 민정수석실 복원을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 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회견 막바 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·연합뉴스



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기 마지막날인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착석하고 있다.

국힘 당권주자들 "당권·대권 분리 규정 손봐야"

'당 대표가 대권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 물러나야' 룰 개정 여부 의견 수렴 나서

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'당권·대 권 분리'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.

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 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 는데,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 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만큼 당권·대 권 분리 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주장이다.

안철수 의원은 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"차기 대 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"면서 "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"고 말했다.

김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"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 데,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"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

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는 "(주요 정치인 이)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 해"라며 당권·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'대선 1년 전 사퇴'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

또 다른 주자 역시 "1년 6개월은 너무 길다"며 "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 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·대권 분리 규정은 '대 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 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'는 내용이다.

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~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 (2027년 3월 3일)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. 임기 2년을 못 채운 1 년여 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.

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 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

당 안팎에서는 권성동·권영세·김태호·안철수

의원, 나경원 당선인, 유승민 전 의원,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.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

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"당권·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 견을 수렴할 것"이라며 "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 토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당권·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(국민의힘 전신) 대표 시절 당 헌으로 확정됐다.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 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 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.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.

/연합뉴스



국힘 이철규 "전대, 당원투표 100% 대표 선출 규정 그대로 적용"

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8일 당 대표 선출을 위 한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와 관련해 "선출된 권력, 정통성 있는 권력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"고 말했다.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 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"당원 뜻에 따라 선출된 당 지도부가 당직자의 선출 규정, 그 다음에 공직 후보 자의 공천 경선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"고 설명했다.

현재 '당원투표 100%'인 대표 선출 규정을 이번 전대에는 그대로 적용하고, 향후 어떻게 손볼지에 대해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아닌, 전당 대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.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

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"당사자가

그러면서도 "내가 이번에 원내대표(도전)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는, 공천관리위원으 로서 우리가 진 선거 결과에 느낀 책임감이 있다"며 "당과 국민을 위해 더 정치적 기여를 하고 싶은 욕 망을 접은 배경은 거기에 있다"고 강조했다.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.

이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는 "선거는 당 이 치르는 것"이라며 "무조건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대통령이 잘못했다, 용산이 잘못했다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"고 말했다. /연합뉴스



광주과학기술원 / 호수공원 앞

